

미래엔 교과서
자습서



**바른답·
알찬풀이**

I 인권 보장과 헌법

주제별 형성 평가

1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

9~10쪽

01 ④	02 ⑤	03 ⑤	04 ①	05 ③
06 ③	07 ①	08 ⑤		

- 01** 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당연한 권리라는 점에서 천부성을,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히 보장된다는 점에서 항구성을 지닌다.

바로 잡기 첫 번째 진술. 인권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인류 구성원 모두가 가진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지닌다.

두 번째 진술. 인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보장된다는 점에서 천부성을 가진다.

다섯 번째 진술.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 02** 미국 독립 혁명과 프랑스 혁명은 대표적인 근대 시민 혁명이다. 근대 시민 혁명에서는 인권 선언을 통해 국가 권력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인 자유권과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의 보장을 요구하였다.

바로 잡기 ① 시민 혁명 이후 여성 참정권 운동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② 시민 혁명에서는 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③ 산업 혁명 이후에 나타난 주장이다.

④ 최근 환경 오염과 기후변화 등으로 강조되고 있다.

- 03** 제2조에서 압제에의 저항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라고 명시한 것은 시민이 정치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바로 잡기 ① 제2조에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의무를 강조했다고 볼 수 없다.

② 제3조에서 국민 주권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국가보다 개인이 우위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③ 제1조에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므로 국가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인권은 보장된다고 보았다.

④ 제시된 조항에서 시민의 직접 민주 정치를 강조한 내용은 없다.

- 04** (가)는 영국 명예혁명의 결과 발표된 권리 장전, (나)는 차티스트 운동 과정에서 나온 인민헌장이다. 권리 장전은 왕의 전제 권한을 의회가 견제하도록 하여 의회 정치 확립에 영향을 미쳤다.

바로 잡기 ② 영국의 노동자들은 인민헌장에서 남성 노동자의 선거권을 주장하였다.

③ 사회권을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다.

④ 국경을 초월한 연대권을 강조한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이다.

⑤ 권리 장전에서는 자유권과 평등권을, 인민헌장에서는 참정권을 강조하였다. 이 권리들은 모두 1세대 인권에 해당한다.

- 05** 영국에서는 경마장 사건으로 여성 참정권 운동이 더욱 가열되어 1918년에 30세 이상 여성에게 참정권이 인정되었고, 1928년에는 일정한 나이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참정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즉, 경마장 사건은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참정권을 인정하는 보통 선거 제도의 확립을 가져왔다.

- 06**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발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는 자유와 평등, 국민 주권주의를 명시하였다. 정치 참여에서 양성평등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 07** 자유권과 평등권은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 혁명, 프랑스 혁명 등 근대 시민 혁명의 결과 나타난 각종 인권 선언에서 주로 강조되었다.

바로 잡기 ② 사회권은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③ 연대권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더 나아가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중시하는 권리이다. 인종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평화의 권리,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등이다.

④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자유권이다.

⑤ 차티스트 운동에서 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은 참정권이다.

- 08** 제시된 자료에서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에 전 세계인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오늘날 인권 보장에 대한 국제적 연대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현대 사회의 인권

14~15쪽

01 ③	02 ⑤	03 ①	04 ④	05 ③
06 ⑤	07 ⑤	08 ②		

01 도시의 인구 집중으로 부각된 인권은 주거권과 안전권이다. 취약 계층에게 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정책과 관련한 권리는 주거권이다. 따라서 A는 문화권, B는 주거권, C는 안전권이다. 안전권은 제도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전 의식 실천으로 보장된다.

바로 찾기 ①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는 안전권과 관련된다.

- ② 근대 시민 혁명에서부터 강조된 권리는 자유권과 평등권이다.
- ④ 여가의 증대가 등장 배경인 것은 문화권이다.
- ⑤ 안전권은 국가가 각종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02 (가)는 주거권, (나)는 안전권이다. 현대 사회는 도시에 인구가 집중하면서 주택 부족이나 열악한 주거 환경 등이 사회 문제가 되었다.

바로 찾기 ① 주거권과 안전권은 모두 현대 사회에 와서 강조된 권리이다.

- ② 주거권과 안전권은 모두 헌법의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된다.
- ③ 주거권과 안전권은 모두 국가의 제도와 정책에 의해 더욱 잘 보장된다.
- ④ 주거권과 안전권은 모두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03 (가)는 문화권, (나)는 안전권이다. ㄱ. 문화권의 의미에 관한 설명이다. ㄴ.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에 해당한다.

바로 찾기 ㄷ. 국제 연합(UN) 기후변화 협약처럼 국제적 협력이 요구되는 권리는 환경권이다.

ㄹ. 문화권은 인구의 도시 집중과는 거리가 멀다.

04 제시된 자료는 주거 기본법의 일부 조항이다. 주거권은 오늘날 주택 부족, 열악한 주거 환경 등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된 인권이다.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05 사례에서 마을 사람들은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ㄴ. 우리 헌법에서는 환경권을 국민의 권리로 보장함과 동시에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ㄷ. 환경권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쓰레기 문제 등이 발생하고 최근 기후변화

에 따른 기상 이변이 환경 문제로 대두하면서 등장하였다.

바로 찾기 ㄱ.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권리는 자유권이다.

ㄹ. 자유권에 관한 설명이다.

06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 공연, 전시, 문화재 등 문화 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제시된 자료에 부각된 권리는 문화권이다. 문화권은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여가가 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바로 찾기 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설명이다.

- ② 자유권에 관한 설명이다.
- ③ 주거권에 관한 설명이다.
- ④ 환경권에 관한 설명이다.

07 갑은 반지하 주거지를 탈출하고 싶어 하고, 을은 땅꺼짐 현상의 위험성을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A는 주거권, B는 안전권이다. 주거권과 안전권은 모두 현대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인권이다.

바로 찾기 ①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는 자유권이다.

- ② 주거권과 안전권은 모두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 ③ 주거권과 안전권은 모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④ 주거권과 안전권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08 ㉠은 잊힐 권리이다. 과거 자신이 인터넷상에 올렸던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사생활 침해 문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삭제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잊힐 권리가 등장하였다.

3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

19~20쪽

01 ⑤	02 ④	03 ②	04 ③	05 ②
06 ②	07 ⑤	08 ①		

01 ㄷ. 산불 예방은 공공복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해 입산을 통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이유로 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 ㄹ. 집회 개최 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 행정 기관의 독단적인 권력 행사가 가능하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집회 허가제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바로 찾기 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

적으로 대우해야 함을 의미한다.

ㄴ.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국민이 물질적·정신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국가가 국민의 모든 행복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02 (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선거권을 실현하는 것이고, (나) 수업을 받는 것은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선거권은 기본권 중에서 참정권에 해당하며, 교육받을 권리는 사회권에 해당한다.

03 갑은 청원권, 을은 국가 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청원권과 국가 배상 청구권은 모두 청구권에 해당한다. ㄱ. 청구권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적극적인 권리이다. ㄴ.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이 강하다.

바로 보기 ㄴ. 청구권은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 구제를 행사하게 된다.

ㄷ.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권리는 사회권이다.

04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자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바로 보기 ①, ②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④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⑤ 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05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법원의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국가 기관 간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보기 ① 신체가 건강한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주고 있으므로 일정 연령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주는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③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재판을 1회만 허용하고 있어 구제 절차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④ 집회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선거권, 집회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 정당 가입의 자유 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즉,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6 제시문은 권력 분립 제도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의 국정 감사 및 조사는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역할로서 권력 분립 제도를 실현하는 내용이다.

07 질문자는 채용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던 고졸자와 대졸자의 차별과 관련하여 국가 인권 위원회에 구제를 위한 진정을 할 수 있다.

바로 보기 ① 차별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대표를 고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② 위헌 법률 심판은 어떤 법률의 헌법 위배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것이다.

③ 고충 민원은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제기하는 것이다. 회사의 차별 행위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헌법 소원 심판은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청구할 수 있다. 갑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은 아니므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08 민주적인 선거 제도, 복수 정당제, 권력 분립 제도 등은 모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제도적 장치이다.

4 시민의 권의 보호를 위한 시민 참여 24~25쪽

01 ②	02 ③	03 ⑤	04 ③	05 ①
06 ①	07 ②	08 ④		

01 ㄱ. 갑은 시민의 정치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무지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의사 결정이 지연되어 정치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ㄴ. 갑은 시민의 정치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을은 독재 정치를 예방하기 위해 대중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바로 보기 ㄴ. 을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독재 정치의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즉,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독재 정치를 견제해야 함을 강조한다.

ㄷ. 갑과 을은 모두 직접 민주 정치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02 제시문은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 공동체의 발전을 촉진한 사례이다.

바로 보기 ①, ② 제시된 사례와 관련 없는 내용이다.

④ 제시된 사례에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⑤ 을의 사례에서는 시민 단체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지만 갑의 사례는 시민 단체의 역할과 관련이 없다.

03 갑이 어제 구청 누리집에 공원 환경 개선안을 올린 것은 일시적이고 개별적인 참여 방법이다. 을이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꾸준한 활동을 하는 것은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참여 방법이다.

04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주민의 의견을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이므로 주민의 자치 역량이 강화된다. 주민은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게 되며 지역사회의 정치 과정에 관심과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바로 잡기 ③ 주민 참여로 지방 자치가 활성화되면 지역의 정책 결정에 중앙 정부의 영향력은 약해질 것이다.

05 국가가 잘못된 정책을 집행하려고 하거나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할 때 시민들이 나서서 막음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표현에서 시민 참여가 필요한 까닭을 알 수 있다.

06 갑은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다.

바로 잡기 ② 을은 이익 집단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익 집단은 사회 전체의 보편적인 이익이 아니라 자기 집단의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

③ 병은 온라인 참여 방법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④ 가장 기본적인 시민 참여 방법은 선거와 투표이다.

⑤ 투표 참여는 집단 간의 갈등 조정과는 관련이 없다.

07 제시문은 시민불복종과 관련한 롤스의 주장이다. ㄱ. 롤스는 시민불복종으로 인한 처벌 감수 부분까지도 정당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ㄴ. 어떤 법이 심각하게 부정의하다면 당연히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시민불복종을 행사할 수 있다.

바로 잡기 ㄴ. 시민불복종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최종 판단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공유된 정의관이다.

ㄷ. 시민불복종은 법에 관한 충실성의 한계 내가 아니라 최후에 법을 위반하면서 이루어진다.

08 시민불복종은 사회 정의를 훼손한 법이나 정책에 항의한다는 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한 여러 합법적인 방식이 실패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비폭력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5 국내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

28쪽

01 ③

02 ②

03 ②

04 ④

01 A국과 B국에서 차별의 대상과 정도가 변화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기준이 상대적이며 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잡기 ① A국에서는 흑인이 백인보다 훨씬 많지만 사회적 소수자로 차별을 받았으며, B국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비슷한 비중이지만 차별을 받았다. 이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는 집단의 크기 에 의해 결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② 흑인이나 여성이 개인적 능력이 부족해서 차별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사회적 소수자는 해당 사회에서 자신이 차별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⑤ 사회적 소수자는 선천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특징 때문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도 많다.

02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이들에 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이들에 관한 편견을 제거하는 의식 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

03 ㄱ.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한다. ㄷ. 연소 근로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바로 잡기 ㄴ.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의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청소년 본인이 사용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ㄴ. 갑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 근로를 하므로 12,000원×7시간=84,000원에 연장 근로 1시간에 따른 임금(50%를 가산한 18,000원)을 합하면 하루 최대 102,000원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04 근로 기준법상 연소 근로자는 하루 7시간 이내에서 일해야 한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의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근로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바로 잡기 을. 연소 근로자라도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정. 연소 근로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근로 계약을 본인이 체결해야 한다. 부모가 대신 체결해서는 안 된다.

6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

31쪽

01 ① 02 ② 03 ⑤ 04 ④

01 자료는 세계 각국의 빈곤 실태를 나타낸 것으로서 국가 간 빈부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인지는 알 수 없다.

02 성차별은 남녀 간 임금 격차, 고용, 승진, 교육 수준, 정치 참여 기회 등에서의 남녀 차별로 나타난다. 성차별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인권 지수로는 성 불평등 지수, 유리 천장 지수 등이 있다.

바로 잡기 ㄴ. 세계 기아 지수는 세계 각국의 빈곤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ㄹ. 세계 언론 자유 지수는 세계 언론 매체의 자유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03 성 격차 지수 순위가 낮은 국가 중에는 아랍권 국가들이 많다. 이 나라들은 종교적 관습에 의한 여성 차별 관행이 남아 있다.

바로 잡기 ① 성 격차 지수는 남녀 임금 격차를 포함하므로 남녀 임금 격차가 클수록 순위가 낮다.

② 순위가 높은 국가들은 주로 북유럽에 있다.

③ 순위가 낮은 국가들은 사회적·경제적 지위에서 남녀 차별이 심한 편이다.

④ 난민과 기아 문제는 국제 사회가 직면한 인권 문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제시된 자료와는 관련이 없다.

04 제시문에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연합 세계 식량 계획(WFP)이라는 국제기구의 활동이 나타나 있다. 필자는 국제기구 이외에도 국가, 개인, 민간단체 등이 연대하여 빈곤 국가를 지원하면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단원 총괄 평가

36~39쪽

01 ④ 02 ① 03 ② 04 ② 05 ①
06 ② 07 ② 08 ④ 09 ⑤ 10 ①
11 ② 12 ④

13 (1) (가) 세계 인권 선언 (나) 여성 차별 철폐 협약 (다) 아동 권리 협약 (2) **예시 답안** 세계 인권 선언, 여성 차별 철폐 협약, 아동 권리 협약 등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인권 침해를 받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서로 협력하여 자신의 인권뿐만 아니라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인권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연대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14 **예시 답안**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에 의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지배를 막고 법률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만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15 **예시 답안** 주민 조례 청구, 주민이 직접 지방 의회에 조례안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주민이 지방 자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16 **예시 답안**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년은 스스로 관련 노동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이러한 지식을 갖추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01 밑줄 친 ㉠은 인권이다. ㄴ.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갖는 권리이므로 천부 인권 사상에서 유래하였다. ㄹ. 인권은 헌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인류 구성원 모두가 갖는 권리이다.

바로 잡기 ㄱ. 인권은 인종, 성별, 나이, 종교, 국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이므로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는 권리이다.

ㄴ. 인권은 남에게 양도할 수 없고 남의 권리를 빼앗을 수도 없다.

02 (가)는 자유권이다.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에서 벗어나 개인이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이다.

바로 잡기 ② 보통 선거 제도와 관련한 것은 참정권이다.

③ 자유권은 국가의 존재와 관계없이 인정된다.

④ 인권 보장의 국제적 기준을 제시한 것은 세계 인권 선언을 통해서이며 이는 연대권과 관련 있다.

⑤ 복지 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는 사회권이다.

03 제시문은 여성 참정권 운동 당시 여성들이 주장한 내용이다. 여성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여성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에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일부에게만 주어졌었음을 알 수 있다.

04 제시된 기사는 환경권과 관련이 있다.

바로 잡기 ②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는 권리는 자유권이다.

05 시각 장애인이 온라인 과정을 수강했으나 학습 자료를 전자 입출력기에서 이용할 수 없다면 학습 과정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밑줄 친 ㉠은 평등권이다. 평등권은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다.

바로 잡기 ② 환경권, ③ 참정권, ④ 자유권, ⑤ 청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06 헌법 제53조 제2항은 법률안 거부권(재의 요구권), 제61조 제1항은 국정 감사권, 조사권에 관한 조항이다. 모두 권력 분립 제도와 관련이 있다. 권력 분립 제도는 국가 권력을 여러 곳에 분산시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로 잡기 ㄴ. 권력 분립 제도를 실현한다고 해서 국가 경쟁력이 향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ㄹ. 권력 분립 제도는 행정 관료의 전문성 증대와는 관련이 없다.

07 갑은 형사 사건의 피고인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직장을 잃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에 갑은 국가에 형사 보상 청구권을 행사하여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다.

08 (가)에서 갑은 개별적인 방법으로, (나)에서 을은 시민 단체 활동을 통해 집단적인 방법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가), (나)는 모두 시민이 직접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바로 잡기 ㄱ. 갑은 공청회에 꾸준히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였으므로 (가)는 지속적인 참여 방법에 해당한다. 을은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므로 (나)도 지속적인 참여 방법에 해당한다.

ㄴ. (가)와 (나)는 모두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으므로 시공간적 제약을 받는 방법이다.

09 사회적 소수자는 신체적·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 의해 차별을 받는 사람들로 사회적 소수자는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

바로 잡기 ㄱ. 구성원의 수가 적다고 해서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

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소수자는 구성원의 수와 관계없이 그 사회에서 권력의 열세에 있어 차별받는 사람들이다.

ㄴ. 사회적 소수자가 현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은 아니다.

10 외국인 근로자 중 산업 재해 사망자의 비율이 내국인보다 3배 이상 높은 상황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1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의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근로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을은 하루 7시간씩 일하고 중간에 1시간의 휴게 시간이 있었으므로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연소 근로자는 하루 7시간 이내에서 일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면 하루 1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정은 하루 7시간 일하면서 1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를 했으므로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바로 잡기 갑.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가 일하려 할 때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근로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한다. 병. 연소 근로자도 본인이 직접 임금을 받아야 한다.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 기준법 위반이다.

12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성 불평등 지수가 1에 가까운 국가들로 종교나 관습 등의 이유로 여성 차별이 심한 나라들이다.

13 20세기 중반 이후 다양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 채점 기준	배점
(가)~(다)의 문서 모두 연대권의 특징을 갖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상
연대권이 드러나 있다고만 쓴 경우	하

14 자료는 헌법 제23조 ①, 제78조, 제118조 ②의 내용이다.

채점 기준	배점
법치주의임을 쓰고, 법치주의의 목적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법치주의임을 쓰고, 법치주의의 목적을 서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중
법치주의만 쓴 경우	하

15 사례는 입법 과정에 참여한 시민 참여 방법을 나타낸다.

채점 기준	배점
주민 조례 청구를 쓰고, 시민 참여의 의의를 두 가지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주민 조례 청구를 쓰고, 시민 참여의 의의를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주민 조례 청구만 쓴 경우	하

16

채점 기준	배점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청소년 입장에서 두 가지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청소년 입장에서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II 사회 정의와 불평등

주제별 형성평가

1 정의의 의미와 필요성

43쪽

01 ② 02 ② 03 ④ 04 ③

01 (가)는 병역 특례라는 사회적 이익을 나누는 것과 관련된 분배적 정의 사례이고, (나)는 잘못에 관한 처벌의 공정함과 관련된 교정적 정의 사례이다.

바로 잡기 ㄴ, ㄹ.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과 교정적 정의 실현을 위한 처벌의 목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가), (나)에 대한 평가도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

02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구분하였고, 특수적 정의는 다시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로 분류하였다.

03 그림의 강연자는 정의가 무엇인지 정하는 방법은 시대마다 다르며, 다양한 정의론은 그 이론이 나타난 시대의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풀기 위해 등장하였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은 다른 시민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각기 자신의 일에 열중하는 것이 정의라고 본 반면, 근대 영국의 벤담은 최대 다수의 사람이 최대 행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연자는 정의를 실현하려면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고민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바로 잡기 ㄴ. 강연자는 어느 시대에도 통용되는 고정된 원칙을 추구하기보다 시대에 맞는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04 인간의 삶에서 정의가 요청되는 까닭은 우선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이다. 인간은 혼자만의 힘으로 살 수 없고,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기 쉽다. 정의는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정의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즉 정의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기본적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으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바로 잡기 ㉔ 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갈등이 생기기 쉽다.

2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

47~48쪽

01 ⑤	02 ③	03 ③	04 ②	05 ②
06 ⑤	07 ①	08 ⑤		

- 01 ①은 분배적 정의이다. 분배적 정의는 한정된 사회적·경제적 자원을 누구에게 얼마나 나누어 주어야 공정한지를 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도 한다.

바로 잡기 ㄱ. 분배적 정의는 사회적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ㄴ.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어떤 분배 기준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 02 어떠한 목적 달성에 이바지한 성과와 실적 정도에 따르는 분배 기준은 ‘업적’,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자질에 따르는 분배 기준은 ‘능력’, 의식주를 비롯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우선순위에 따르는 분배 기준은 ‘필요’이다.

- 03 업적에 따른 분배는 달성한 결과를 객관화·수량화할 수 있어 평가와 측정이 비교적 쉽고, 능력에 따른 분배는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실현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업적에 따른 분배와 능력에 따른 분배는 모두 개인의 성취동기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타고난 재능이나 환경과 같이 우연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바로 잡기 ③ 필요에 따른 분배는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 04 (가) 사례와 관련된 분배 기준은 ㉠ 능력, (나) 사례와 관련된 분배 기준은 ㉠ 업적, (다) 사례와 관련된 분배 기준은 ㉠ 필요이다.

- 05 ①은 교정적 정의이다. 교정적 정의는 주로 국가의 법 집행에 따른 처벌과 관련되고, 불법 행위나 부정의를 바로 잡음으로써 실현된다.

바로 잡기 ㄴ. 교정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가 널리 퍼지고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ㄹ. 잘못된 만큼의 처벌을 받을 때 교정적 정의가 실현된다.

- 06 갑은 처벌의 목적이 응보에 있다고 보고, 을과 병은 예방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갑은 을, 병과 달리 응보주의 입장

에서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해악을 처벌로 가할 때 교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바로 잡기 ④ 갑이 아닌 을만이 처벌은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 07 처벌의 목적이 응보에 있다는 보는 입장은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해악을 처벌로 가할 때 교정적 정의가 실현된다고 본다.

바로 잡기 [설명 2], [설명 3]은 옳은 설명이므로, ‘예’에 표시해야 한다.

- 08 갑은 베카리아, 을은 칸트이다. 베카리아는 예방주의 입장에서 처벌을 통해 범죄자의 행동을 통제하고, 범죄자가 처벌받는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 줌으로써 잠재적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칸트는 응보주의 입장에서 범죄에 상응하는 해악을 처벌로 가해야 하고, 범죄자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이므로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바로 잡기 ⑤ 처벌이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은 베카리아만 해당한다.

3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과 적용

53~54쪽

01 ②	02 ④	03 ④	04 ⑤	05 ④
06 ②	07 ⑤	08 ③		

- 01 갑은 자유주의 입장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는 것이 정의롭다고 볼 것이다. 을은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감염병으로부터 공동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볼 것이다. 을은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를 존중하고 지켜야 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할 것이다.

바로 잡기 ㄴ. 공동선 실현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보는 것은 갑이 아닌 을이다.

ㄹ. 을의 입장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 02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따르면 의무 투표제는 정치 참여를 통해 공동체에 관한 의무를 수행하는 등 공동선 실현을 위한 제도이므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 이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바로 잡기 ①, ③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이다.

- 03 제시문의 사상가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주장한 롤스이다. 롤스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입장에서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공정성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라고 보았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두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보기 ㄱ. 개인의 소유 권리를 배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정의라고 본 사상가는 노직이다.

- 04 공동체주의는 정의를 공동체에 관한 의무에 연관 지어 바라보며, 인간의 삶에서 공동체가 가지는 의미를 중시한다. 또한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보고, 개인이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며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존재라고 본다.

바로 보기 ㉔. 공동체주의가 아닌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 05 제시문의 사상가는 노직이다. 노직은 자유 지상주의 입장에서 개인의 소유 권리를 배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정의라고 보고,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호하는 등의 제한적 역할만 하는 최소 국가를 옹호하였다. 따라서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 보기 ①, ②, ③, ⑤. 노직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06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강조하는 노직은 용병제 도입에 대해 개인의 자유로운 계약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정당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 07 제시문의 사상가는 매킨타이어이다. 공동체주의적 정의를 관을 지지하는 매킨타이어는 인간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사회적 연대감이 필요한 존재라고 본다. 또한 개인은 공동체의 도덕을 바탕으로 가치관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본다.

바로 보기 ㄱ, ㄴ.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입장이다.

- 08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지지하는 매킨타이어는 현세대는 공동체의 유산뿐만 아니라 빚도 물려받아야 하므로 과거 세대의 잘못을 현세대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부당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따라서 매킨타이어는 과거 세대의 잘못이라도 현세대는 그에 관한 책임을 지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4 다양한 불평등 현상

57~58쪽

01 ⑤	02 ①	03 ②	04 ④	05 ④
06 ⑤	07 ③	08 ②		

- 01 (가)는 식당 주인이 시각 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 사례를, (나)는 임금 체불과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을 겪고 있는 이주 노동자 차별 사례를 보여 준다. (가)의 장애인과 (나)의 이주 노동자는 장애, 출신 국가 등으로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에 포함된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은 사회적 약자가 사회 주류 집단과는 다르다는 선입견 및 편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 02 사회 불평등 현상은 부, 권력, 명예 등 사회적 자원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개인과 집단이 서열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 불평등 현상이 심화하면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을 가로막을 수 있다.

바로 보기 ㉔. 누구나 사회적 자원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그 양은 한정되어 있다.

㉔. 사회적 자원을 많이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생기면서 개인이나 집단 간 수직적인 위계질서가 형성된다.

- 03 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의 일종인 사회 계층의 양극화이다. 사회 계층의 양극화는 부가 상위층에 집중되고 하위층 비율이 늘어나며 중위층 비율이 줄어드는 현상이다. 사회 계층의 양극화 현상의 대표적인 원인은 자산과 소득의 차이에 따른 경제적 격차이다.

- 04 기사는 도보를 기준으로 한 도서관 접근성과 국공립 보육기관 접근성이 서울은 높으나 지방은 낮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가장 적절한 기사 제목은 ‘점점 심화하는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라고 할 수 있다.

- 05 그래프는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출 규모가 큰 기업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공간 불평등 현상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바로 보기 ㄱ. 문화적 자원은 수도권에 더 집중되어 있을 것이다. ㄴ. 매출 규모 상위 기업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 06 자료는 시도별 치료 가능 사망률을 나타낸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숨진 이들의 비율을 따져 보는 지표로, 공간 불평등 현상이 의료 등 생활 환경 전반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바로 잡기 ① 치료 가능 사망률은 낮을수록 좋다.

②, ③, ④ 서울은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가장 낮고, 의료 서비스가 가장 잘 갖추어져 있으며, 제주보다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 07**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신도심지와 구도심지 등 공간을 기준으로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바로 잡기 ① 공간 불평등 현상이란 지역 간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자원이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격차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② 지역 격차가 나타난 가장 큰 원인은 과거 경제 발전 과정에서 추진된 성장 거점 개발 정책이다.

- 08** 제시문은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대학 진학 확률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경제적 격차는 교육 기회의 격차로 이어져 부모의 계층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바로 잡기 ㄴ. 부모의 소득 수준은 자녀의 고등 교육에 영향을 준다. ㄹ. 제시문의 현상은 개인의 능력에 따른 계층 이동을 어렵게 해 폐쇄적인 사회 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5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

62~63쪽

01 ③	02 ①	03 ⑤	04 ④	05 ②
06 ②	07 ②	08 ⑤		

- 01** ㉠은 사회 복지 제도이다. 사회 복지 제도는 사회 계층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사회 복지 제도에는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등이 있다.

바로 잡기 ㄱ. 수도권 과밀화 해소는 지역 격차 완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ㄹ. 여성 할당제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02** 사회 보험에는 국민 건강 보험, 국민연금, 고용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있다. 공공 부조에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료 급여, 기초 연금이 있다. 사회 서비스에는 노인 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사·간병 서비스가 있다.

- 03** ㉠은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이다.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는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게 하는 제도로 정의로운 사회 실현에 기여한다. 또한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

등을 실현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차별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시행된다. 그 예로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성 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되는 여성 할당제 등이 있다.

바로 잡기 ㄱ. 사회 복지 제도 중 공공 부조에 관한 설명이다.

- 04** 금전적 지원이 아닌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 복지 제도는 사회 서비스이고, 금전적 지원을 하지만 사전 예방적 성격을 지니지 않은 사회 복지 제도는 공공 부조이며, 금전적 지원과 동시에 사전 예방적 성격을 지닌 사회 복지 제도는 사회 보험이다.

- 05** 제시된 사례는 에스파냐와 노르웨이의 여성 할당제 관련 내용이다.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의 일환인 여성 할당제는 기업의 고위직 등에 여성의 진출이 어려운 상황을 교정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직간접적 혜택을 제공하여 성 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이다.

바로 잡기 ㄴ, ㄷ. 여성 할당제는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를 개선하고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도입된 제도적 방안에 해당한다.

- 06** ㉠은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이다.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의 일환으로,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07**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을 통해 공간 불평등을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지역 격차를 완화하려면 우선 수도권에 집중된 다양한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바로 잡기 ㉠ 성장 가능성이 큰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하는 성장 거점 개발 정책은 지역 격차가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다.

㉡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는 공공 기관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및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08**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적 실천 방안으로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시민 토론회 참석, 정부 홈페이지 민원 제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신이 사회적 약자에 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는 것 등이 있다.

대단원 총괄 평가

68~71 쪽

01 ④	02 ⑤	03 ③	04 ⑤	05 ②
06 ⑤	07 ③	08 ④	09 ③	10 ④
11 ⑤	12 ⑤			

13 [예시 답안] 뛰어난 재능을 가지게 된 것은 본인의 노력이 아니라 행운의 결과이므로 행운에 따른 혜택은 본인에게 당연히 보장 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뛰어난 재능을 후하게 보상 하는 사회에 산다면 그것 또한 우연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14 (1) [예시 답안]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중시한다. 이에 따르면 갑의 주장은 정의에 어긋나 지 않는다고 평가할 것이다. 독립된 개인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적 정의관은 과거 세대의 잘못에 대한 책임 여부가 현대의 선택이나 동의에 달려 있다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을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대의 선택이나 동의에 따라 책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예시 답안]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이 공동체의 영향을 받 으며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이 에 따르면 갑의 주장은 정의롭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공동체의 유산뿐만 아니라 빛이나 의무 역시 물려받기 때문이다. 반면 을의 주장에 긍정하며 과거 세대의 잘못일지라도 현대는 그에 관한 책임을 지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15 (1)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2) [예시 답안] 소수 인종 우대 정책에 대한 찬성 근거는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에서 소외된 소수 인종 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불평등 현상을 개선해야 한 다는 것이 있다. 반대 근거는 대학 입학 자격은 인종이 아니라 학생 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바탕으로 주어져야 공정하다는 것 이 있다.

16 [예시 답안] 공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자립형 지역 발전 기반 구축 의 전략 사례로는 여러 지방 자치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브랜드 구축, 관광 마을 조성 및 지역 축제 등이 있다.

01 갑은 플라톤, 을은 벤담이다. 벤담은 공리주의 입장에서 최대 다수의 사람이 최대의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라고 보았다. 플라톤과 벤담은 모두 정의는 사회 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것이다.

[바로 잡기] ㄱ. 플라톤은 다른 시민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 자 신의 일에 열중할 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02 ㉠은 교정적 정의, ㉡은 분배적 정의이다. 교정적 정의는 잘못에 대한 대응이 공정한지와 관련되고, 주로 국가의 법 집행에 따른 처벌을 통해 불법 행위를 바로잡음으로써 실현된다. 분배적 정의는 사회적 이익이나 부담을 공정하 게 나누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배 기준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 하다.

[바로 잡기] ⑤ 교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의 공정한 기준에 관한 판 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03 능력에 따른 분배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이므로 [설명 1]은 ‘예’에 표시되 어야 한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우선 순위에 따라 다양한 재화나 가치가 분배되어야 한다고 보 는 것은 필요에 따른 분배에 관한 내용이므로 [설명 2]는 ‘아니요’에 표시되어야 한다.

[바로 잡기] ㉢ 필요에 따른 분배는 많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 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으 므로 [설명 3]은 ‘예’에 표시되어야 한다.

04 (가) 흥행 보수 사례는 업적에 따른 분배, (나) 대학 입학 특 별 전형은 필요에 따른 분배, (다) 의사 채용 공고 자격 요 건은 능력에 따른 분배에 해당한다. 업적에 따른 분배는 필요에 따른 분배에 비해 과열 경쟁으로 구성원 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바로 잡기] ⑤ (다) 능력에 따른 분배와 (가) 업적에 따른 분배는 모 두 개인의 성취동기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5 제시문의 사상가는 롤스이다. 롤스는 타고난 재능이나 환 경적 조건은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적 우연성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운으로 얻은 혜택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롤스는 개인의 재 능은 모두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환경적 조건에 따라 형성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 았다.

[바로 잡기] 두 번째 입장. 롤스는 가족적 배경 또는 환경적 우연성 에서 비롯된 혜택은 개인이 오롯이 누릴 자격이 없다고 보았다. 네 번째 입장. 롤스는 사회적 약자들은 우연히 불운한 상황 속에 있게 된 것이기도 하므로 성공하지 못한 것을 온전히 개인의 책 임으로 여겨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06 처벌에 있어 갑은 응보주의, 을은 예방주의와 공리주의 입장을 취한다. 갑은 범죄와 처벌 간의 균형을 강조하며, 범죄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이므로 스스로의 의지로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공 익을 침해하였다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을은 처벌을 통해 범죄자의 행동을 통제 및 교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바로 잡기 ⑤ 갑은 응보주의를, 을은 예방주의를 지지한다.

- 07** 갑은 처벌의 목적이 예방에 있다고 보는 베카리아, 을은 응보에 있다고 보는 칸트이다. 베카리아는 범죄자가 처벌 받는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 주는 것이 잠재적인 범죄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본다. 칸트는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이므로, 스스로의 의지로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공익을 침해하였다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바로 잡기 ㄱ. 칸트의 입장이다.

ㄴ. 베카리아의 입장이다.

- 08** 베카리아는 처벌이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살인자에 대한 처벌은 사형보다 범죄 예방 효과가 큰 종신 노역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반면 칸트는 처벌의 본질이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보복을 가하는 것이므로,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바로 잡기 ①, ② 베카리아는 살인자에 대한 처벌은 사형보다 범죄 예방 효과가 큰 종신 노역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사형 제도에 반대한다.

③ 칸트는 사형이 살인에 대한 응당한 보복이라고 보고 사형 제도에 찬성한다.

⑤ 베카리아와 달리 칸트는 사회적 이익 증진 여부와 상관없이 사형을 살인자에 대한 응당한 보복으로 보고 사형에 찬성한다.

- 09** 갑은 자유주의적 정의관, 을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지지하고 있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지지하는 을은 공동체 발전을 위해 개인에게 주어지는 의무를 중시하고,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지지하는 갑과 달리 개인이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 잡기 ㄱ. 갑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ㄴ. 갑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적 의미로 공동체의 역할을 긍정하고, 을은 개인이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며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존재임을 강조하며 인간의 삶에서 공동체가 가지는 의미를 강조한다.

- 10**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사익(개인선) 실현을 중시하고,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공익(공동선) 실현을 중시한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

바로 잡기 ㉠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개인이 어떠한 삶이 좋은 삶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체는 개인에게 특정한 가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공동체가 공유하는 중

은 삶의 모습을 추구할 것을 중시하는 입장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다.

- 11** (가)는 부가 상위층에 집중되고 하위층 비율이 늘어나며 중위층 비율이 줄어드는 사회 계층의 양극화 현상을, (나)는 지역 간 의료 격차에 따른 공간 불평등 현상을 보여 준다. 사회 계층의 양극화 현상과 공간 불평등 현상이 심화할 경우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바로 잡기 ④ (나)는 수도권에 의료 시설이 집중되고 있어 지방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 준다.

- 12**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 제도에는 ㉠ 공공 부조, ㉡ 사회 보험, ㉢ 사회 서비스가 있다. 공공 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 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제도이다. 사회 서비스는 사회적 약자의 자활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공공 부조는 조세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회 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잡기 ⑤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이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과 달리 사회 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13** 능력에 따른 분배는 타고난 재능이나 환경과 같은 우연적 요소가 개입할 수 있고, 능력을 평가하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재능을 가지게 된 것이 노력이 아니라 행운의 결과라는 것, 재능을 후하게 보상하는 사회에 사는 것도 우연이라는 내용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재능을 가지게 된 것이 노력이 아니라 행운의 결과라는 것, 재능을 후하게 보상하는 사회에 사는 것도 우연이라는 내용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중
재능이 우연적 요소라고만 서술한 경우	하

(1) 채점 기준	배점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갑에 대한 긍정, 을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비교하여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입장에서 갑과 을의 주장에 대한 평가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2) 채점 기준	배점
개인이 공동체 속에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갑에 대한 부정, 을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비교하여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입장에서 갑과 을의 주장에 대한 평가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15	(2) 채점 기준	배점
	소수 인증 우대 정책에 대한 찬성 근거와 반대 근거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소수 인증 우대 정책에 대한 찬성 근거와 반대 근거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16	채점 기준	배점
	지역 브랜드 구축, 관광 마을 조성 및 지역 축제와 같은 장소 마케팅 사례를 두 가지 모두 서술한 경우	상
	지역 브랜드 구축, 관광 마을 조성 및 지역 축제와 같은 장소 마케팅 사례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Ⅱ 시장경제와 지속가능발전

주제별 형성 평가

1 자본주의의 발달과 시장경제

77~78쪽

01 ⑤	02 ③	03 ①	04 ④	05 ③
06 ①	07 ⑤	08 ②		

01 제시문은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이다. 자본주의는 사유 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경제 체제이다. 자본주의는 사유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경제활동의 자유 및 사적 이익 추구를 인정한다. 또한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 체제와 결합한다.

바로 찾기 ⑥ 자본주의는 모든 생산 수단을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02 ㉠은 자본주의, ㉡은 자유방임주의이다. 자본주의는 사유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경제활동의 자유 및 사적 이익 추구를 인정한다. 자유방임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자본주의와 자유방임주의는 공통적으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강조한다.

바로 찾기 ③ 자유방임주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공기업 전환을 강조하지 않는다.

03 산업 자본주의는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 혁명을 계기로 등장하였다. 산업 혁명을 거치며 공장제 기계 공업이 발달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조업을 바탕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산업 자본주의가 발전하였다. 산업 자본주의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은 애덤 스미스이다.

바로 찾기 ㉠ 시장 실패로 인한 대공황을 배경으로 등장한 자본주의는 수정 자본주의이다.

04 제시문의 사상은 산업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애덤 스미스이다. 애덤 스미스는 자연스럽게 사익과 공익을 일치시키는 시장의 기능인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 원리를 중시해야 한다고 보며,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사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의 이기심에 따르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사회의 이익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바로 잡기 ④ 애덤 스미스는 공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부가 증대된다고 보았다.

- 05** 제시문의 사상가는 수정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케인스이다. 케인스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시장 실패를 해결하고 유효 수요를 창출하여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잡기 ①, ②, ④ 케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만을 신뢰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그는 계획경제를 통해 시장경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큰 정부를 통해 시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신자유주의 사상가인 하이에크의 주장이다.

- 06** 제시문의 사상가는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하이에크이다. 하이에크는 정부가 시장에 무분별하게 개입하려는 시도는 인간이 모든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만이라고 보았다. 그는 시장의 조절 능력을 신뢰해야 하며, 각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잡기 세 번째 입장. 하이에크는 계획경제가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훼손한다고 보았다.

네 번째 입장. 하이에크는 복지 정책의 축소를 주장하며,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 07** 제시문의 사상가는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하이에크이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국가는 시장의 자유 경쟁 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능만을 담당해야 하고, 시장의 자생적인 질서를 중시해야 한다.

바로 잡기 ①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개인의 자유도 신장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하이에크는 실업 문제를 국가의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인간의 치명적 자만이라고 보았다.

③ 하이에크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부적절한 개입은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④ 하이에크는 공기업의 확대가 아니라 공기업의 민영화를 주장하였다.

- 08** ㉠에 들어갈 경제 체제는 ‘시장경제’이다. 시장경제 체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 가격에 따라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함으로써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체제이다. 시장경제 체제는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의 사적 이익 추구를 보장하고,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경쟁과 거래를 통해

유지된다. 또한 시장경제 체제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창의성을 촉진하여 사회 전체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다.

바로 잡기 ② 정부의 계획과 명령, 통제에 의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체제는 계획경제 체제이다.

2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

81~82쪽

01 ③	02 ④	03 ②	04 ④	05 ②
06 ④	07 ⑤	08 ①		

- 01** 합리적 선택은 기회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선택이다.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소비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타인을 의식한 소비 형태이다. 이러한 소비 형태를 과시 소비(베블런 효과)라고 한다.

바로 잡기 ㄱ. 타인과의 동조성을 목표로 한 소비는 다른 소비자들 이 어떤 상품을 많이 소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품을 소비하는 경우(풍순 효과)이다.

ㄴ. 일부러 다른 사람이 찾지 않는 상품만을 찾는 소비도 합리적인 소비 형태는 아니다.

- 02** 갑의 A~C 선택에 따른 편익,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기회비용, 순편익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 만 원)

구분	A	B	C
편익	100	200	90
명시적 비용	90	150	60
암묵적 비용	50	30	50
기회비용	140	180	110
순편익	-40	20	-20

㉠이 ‘150’으로 변동할 경우 갑의 A~C 선택에 따른 편익,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기회비용, 순편익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 만 원)

구분	A	B	C
편익	150	200	90
명시적 비용	90	150	60
암묵적 비용	50	60	60
기회비용	140	210	120
순편익	10	-10	-30

이때는 순편익이 가장 큰 A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

이다.

바로 잡기 ① B 선택의 순편익이 가장 크다.

② A 선택의 기회비용은 140만 원으로 C 선택의 기회비용인 110만 원보다 크다.

③ B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30만 원으로 C 선택의 암묵적 비용인 50만 원보다 작다.

⑤ ㉠이 '100'으로 변동하더라도 C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변함없다.

- 03** ㄱ. ㉠은 환불이나 재판매가 되지 않으므로 이미 지불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인 매몰 비용에 해당한다. ㄴ. 합리적 선택은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큰 선택이다. 갑은 가족 여행을 선택하는 합리적 선택을 하였으므로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경우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작다.

바로 잡기 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벌 수 있는 100만 원은 아르바이트 선택의 편익이다.

ㄷ. 갑의 가족여행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100만 원이다.

- 04** 제시된 사례는 의도하지 않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이는 부정적 외부 효과에 해당한다. 부정적 외부 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끼치면 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므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생산되거나 소비되어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

- 05** 어떠한 경제활동이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면 서도 이에 관한 대가를 받지 않는 현상을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한다. 이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거나 소비되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여 시장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 06** (가)는 긍정적 외부 효과의 사례, (나)는 부정적 외부 효과의 사례이다. ㉠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을 유도하는 긍정적 유인으로 작용한다.

바로 잡기 ① (가)는 긍정적 외부 효과의 사례에 해당한다.

② (가)와 (나)는 모두 시장 실패의 사례에 해당한다.

③ 긍정적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경제활동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 및 소비된다.

⑤ 세금을 부과하여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부정적 외부 효과인 (나)이다.

- 07** A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는 재화, B는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이 있는 재화, C는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는 재화, D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는 재화이다. B는 A와 달리 배제성이 없으므로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바로 잡기 ① 무료로 잡을 수 있는 공해상의 생물 자원은 B에 해당한다.

② 공공재는 D에 해당한다.

③ C는 배제성이 있으므로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공급된다고 볼 수 없다.

④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는 식료품은 A에 해당한다.

- 08** (가)는 공공재, (나)는 부정적 외부 효과이다. 비배제성의 특성이 있는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나 소비할 수 있어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바로 잡기 ② 공공재 공급을 시장 기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③ 부정적 외부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징금이나 세금 부과 등 부정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 감면 혜택 등 긍정적 유인의 제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 외부 효과이다.

④, ⑤ (가)와 (나)는 모두 시장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시장 실패의 요인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장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

86쪽

01 ①

02 ③

03 ④

04 ③

- 01** 제시문은 불공정한 거래 행위인 담합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된 사례를 보여 준다. 독과점 시장에서 기업은 담합을 통해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거나 생산량을 임의로 조정하여 경쟁 기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소비자에게 횡포를 부릴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한다.

바로 잡기 ②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된다.

③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막는 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한다.

④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외부 효과가 발생한 경우이다.

⑤ 정부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02** △△ 기업이 이윤 추구에만 급급하지 않고 희귀 질환 환자

를 위한 특수 분유를 생산하는 것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03** 노동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자신이 맡은 임무에 대한 사명감을 지녀야 한다. 노동자 스스로 주어진 권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보장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바로 잡기 정. 노동자는 노동자의 이익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상생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04** 갑은 환경, 동물, 공동체를 배려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고 있다.

바로 잡기 ① 윤리적 소비는 소비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이다.

② 가격 대비 성능을 중시하며 최저가 제품만을 구입하는 것은 윤리적 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윤리적 소비는 경제적 효율성보다 생태적 지속성을 강조한다.

⑤ 환경과 공동체를 고려한 윤리적 소비는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등의 편익을 고려한 소비이다.

4 자산 관리와 금융 생활 설계

90~91쪽

01 ④	02 ⑤	03 ②	04 ①	05 ①
06 ④	07 ②	08 ②		

- 01** 자산 관리의 원칙 중 자산의 가치가 보전될 수 있는 정도는 안전성이고, 자산을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정도는 유동성이다. 따라서 A는 안전성, B는 수익성, C는 유동성이다. 일반적으로 요구불 예금은 주식에 비해 유동성이 높다.

바로 잡기 ① A는 안전성, C는 유동성이다.

②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금융 상품은 수익성이 낮은 편이다.

③ 예금자 보호 제도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⑤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낮은 정도'는 안전성에 관한 설명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02** 예금은 크게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으로 구분되며, 저축성 예금에는 정기 예금, 정기 적금 등이 있다. 따라서 A는 요구불 예금, B는 정기 예금, C는 정기 적금이다.

바로 잡기 ㄱ. 정기 적금은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입금하고 만기가 되면 원리금을 찾는 예금이다.

ㄴ. 요구불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롭다.

- 03** 제시문은 분산 투자의 필요성 및 분산 투자 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을 보여 준다. '100-나이의 원칙'은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숫자만큼의 비율을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라는 것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안전성이 높은 자산의 비율을 늘릴 것을 권하는 원칙이다.

- 04** 펀드는 자산 운용 회사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실물 자산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간접 투자 상품이다. 이는 투자 전문가가 투자를 대신하여 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개인에게 손실이 귀속되는 특징이 있다.

- 05** 주식과 채권 중 주주의 권리를 갖는 금융 자산은 주식이고, 정해진 기일에 원리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 금융 자산은 채권이다. 따라서 A는 주식, B는 채권이다.

바로 잡기 ㄷ. 채권은 정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기업 등이 발행할 수 있다. 발행 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으로 구분된다.

ㄴ. 주식과 채권은 모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 06** 요구불 예금, 주식, 채권 중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주식과 채권이고, 주식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이 회사에 대해 가지는 지분은 주식이다. 따라서 A는 채권, B는 주식, C는 요구불 예금이다. ㄴ. 채권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주식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ㄴ. 요구불 예금은 채권, 주식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

바로 잡기 ㄱ. ㉠은 '예', ㉡은 '아니요'이다.

ㄷ. 요구불 예금은 주식에 비해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높다.

- 07** 생애 주기 곡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이 변화하는 일련의 단계를 수입과 지출의 변화로 나타낸 것이다. B의 면적은 저축에 해당한다. 따라서 $t+1 \sim t+2$ 시기 동안 누적 저축액은 증가한다.

바로 잡기 ① $t \sim t+1$ 시기 동안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

③ 누적 저축액이 가장 많은 시기는 $t+2$ 시기이다.

④, ⑤ 소비 수준을 정하는 데 A~C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8** 제시된 뉴스에는 전쟁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 및 경영 상황 악화가 나타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소비 및 투자 위축, 안전성이나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대한 선호 증가 등의 영향을 미친다.

5 국제 분업과 무역

95쪽

01 ② 02 ⑤ 03 ⑤ 04 ②

01 제시문은 우리나라,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수출품과 수입품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 분업과 무역의 필요성을 추론할 수 있다. 생산 요소의 분포 차이로 나라마다 생산하기 적합한 상품과 어려운 상품이 다르다. 따라서 각 나라가 무역에 유리한 상품을 특화하여 생산하고 서로 교역함으로써 보다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

바로 잡기 ㄴ.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더라도 수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면 자급자족보다 무역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

ㄹ. 절대 우위는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절대적으로 적게 드는 것을 의미한다.

02 제시된 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과거에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었으나 점차 자본 집약적,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본과 기술이 축적되면서 무역에 유리한 비교 우위 상품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바로 잡기 ③ 생산의 기회비용이 작은 상품이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이다.

03 (가)는 절대 우위, (나)는 비교 우위이다. 두 나라 간 무역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모든 상품의 생산에 절대 우위를 가질 때도 각자 비교 우위를 가지는 상품이 존재할 수 있다. 이때 두 나라가 각각 비교 우위 상품을 특화 생산하여 무역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잡기 ㄱ. 한 나라가 상대국에 비해 X재, Y재 모두 생산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다.

ㄴ. 한 나라가 X재, Y재 생산에 모두 절대 우위를 가지더라도 서로 비교 우위 상품을 특화 생산하여 무역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

04 제시된 자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정 무역의 원칙이 나타나 있다. 공정 무역은 아동 인권 및 노동 인권 보호, 빈곤 및 불평등 해소, 환경 보전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단순히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증대시키기보다 발전의 혜택을 골고루 나눔으로써 형평성을 높이하고자 한다.

대단원 총괄 평가

100~103쪽

01 ① 02 ⑤ 03 ⑤ 04 ④ 05 ③
06 ③ 07 ④ 08 ⑤ 09 ③ 10 ③
11 ① 12 ④

13 (1) 긍정적 외부 효과 (2) **예시 답안** 정부는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혜택 등 긍정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14 **예시 답안**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야 한다.

15 **예시 답안** ㉠, 금리가 인상되면 예금의 이자 수익이 높아져 예금과 주식의 상대적인 수익성 차이가 줄어들 수 있고 예금에 대한 선호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은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 부담을 높여 기업의 경영 성과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기업 주식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은 대체로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6 (1) 공정 무역 (2) **예시 답안** 생산자, 노동자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급한다. 생산과 무역의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노력한다. 등

01 그림의 사상은 산업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애덤 스미스이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잡기 ②, ③, ④ 애덤 스미스는 국가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고, 경제 주체들은 자비심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위한다고 보았다. 또한 애덤 스미스는 계획경제 체제를 비판적으로 보았다.

02 제시문의 사상은 수정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케인스이다. 케인스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 대공황과 같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시장의 기능만으로 효율적인 자원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잡기 ㄱ. 케인스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유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ㄴ. 케인스는 정부의 역할 확대를 통해 시장 실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았다.

03 시장 실패를 시정하기 위해 등장한 자본주의는 수정 자본주의이다. 수정 자본주의는 사회 보장 제도의 확충을 위해 큰 정부를 지향하며, 국가의 적극적 재정 지출에 의한 실업 문제 해소를 강조한다.

바로 잡기 ㄱ, ㄴ. 수정 자본주의는 부와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으며, 경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04 갑은 케인스, 을은 하이에크이다. 케인스는 수정 자본주의 입장에서 정부가 공공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이에크는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정부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자생적인 질서인 시장의 원리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케인스에 비해 하이에크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복지 정책 축소를 강조하는 정도(X)’와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강조하는 정도(Y)’는 높고, ‘정부에 의한 시장 개입을 강조하는 정도(Z)’는 낮다. 따라서 정답은 ㉔이다.

05 갑과 을이 A, B를 선택할 때의 편익,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기회비용, 순편익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갑		을	
	A	B	A	B
편익	6,000	6,500	5,500	㉑
명시적 비용	4,000	5,000	4,000	5,000
암묵적 비용	1,500	2,000	㉑-5,000	1,500
기회비용	5,500	7,000	㉑-1,000	6,500
순편익	500	-500	6,500-㉑	㉑-6,500

㉑은 을이 B를 선택할 때의 편익이므로 ㉑과 관계없이 갑은 순편익이 양(+)의 값인 A를 선택한다.

바로 잡기 ① 갑의 경우 A 선택의 기회비용은 5,500원으로 B 선택의 기회비용인 7,000원보다 작다.

② 을의 경우 B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1,500원(=5,500원-4,000원)이다.

④ ㉑이 '6,500'보다 클 경우 을은 순편익이 양(+)의 값인 B를 선택한다.

⑤ A의 가격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갑의 A, B 선택에 따른 편익,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기회비용, 순편익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A	B
편익	6,000	6,500
명시적 비용	5,000	5,000
암묵적 비용	1,500	1,000
기회비용	6,500	6,000
순편익	-500	500

A의 가격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갑의 선택은 A에서 B로 변한다.

06 갑이 A~C를 선택할 때의 편익,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기회비용, 순편익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 만 원)

구분	A	B	C
편익	180	260	240
명시적 비용	70	100	120
암묵적 비용	160	120	160
기회비용	230	220	280
순편익	-50	40	-40

① A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160만 원으로 C 선택의 암묵적 비용인 160만 원과 같다. ②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갖는 B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④ C 선택의 명시적 비용은 120만 원으로 A 선택의 명시적 비용인 70만 원보다 크다. ⑤ A~C의 편익이 각각 50% 감소할 경우 A~C 선택의 편익,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기회비용, 순편익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 만 원)

구분	A	B	C
편익	90	130	120
명시적 비용	70	100	120
암묵적 비용	30	20	30
기회비용	100	120	150
순편익	-10	10	-30

따라서 A~C의 편익이 각각 50% 감소하더라도 갑의 선택은 B로 변함이 없다.

바로 잡기 ③ B 선택의 기회비용은 220만 원으로 C 선택의 기회비용인 280만 원보다 작다.

07 갑이 떡볶이와 김밥을 선택할 때의 편익,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기회비용, 순편익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떡볶이	김밥
편익	㉑	7,000
명시적 비용	5,000	4,500
암묵적 비용	2,500	㉑-5,000
기회비용	7,500	㉑-500
순편익	㉑-7,500	7,500-㉑

㉑이 '7,500'일 경우 김밥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2,500원

으로 떡볶이 선택의 암묵적 비용과 같다.

바로 잡기 ④ ㉠이 '7,500'보다 클 경우 갑은 떡볶이를 선택한다.

- 08** (가)는 부정적 외부 효과, (나)는 긍정적 외부 효과의 사례이다. 외부 효과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시장 실패에 해당한다.

바로 잡기 ② 세금 부과 등의 부정적 유인을 제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부정적 외부 효과이다.

③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소비되는 것은 긍정적 외부 효과이다.

④ 긍정적 외부 효과와 부정적 외부 효과는 모두 시장 실패로,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된다.

- 09** A는 수익성이 높고 안전성이 낮은 포트폴리오이고, B는 안전성이 높고 수익성이 낮은 포트폴리오이다.

바로 잡기 ㄱ. A는 B에 비해 안전성이 낮다.

ㄴ. 주식과 예금 중 일반적으로 주식이 예금보다 수익성이 높고, 예금이 주식보다 안전성이 높다. 포트폴리오가 주식과 예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A는 B에 비해 주식의 비중이 높고, B는 A에 비해 예금의 비중이 높을 것이다.

- 10** (가)는 재무 목표 설정 단계, (다)는 재무 설계안 작성 단계, (라)는 재무 설계안 실행 단계이다.

바로 잡기 ㄴ. 발행 기관이 자금 조달을 위해 돈을 빌리면서 미래에 원리금 지급을 약속한 증서는 채권이다.

- 11** 비교 우위를 통해 국가 간 무역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비교 우위가 나타나는 배경으로 기후·생산 요소·기술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바로 잡기 ㄷ.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 요소의 구성과 차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할 수 있다.

ㄴ. 기술력이 높아 모든 상품을 상대국보다 절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더라도 생산의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특정 상품이 비교 열위에 있을 수 있다.

- 12** 갑국과 을국의 X재,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갑국	을국
X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Y재 2/5단위	Y재 3/2단위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X재 5/2단위	X재 2/3단위

ㄴ. Y재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X재 5/2단위, 을국이 X재 2/3단위로, 을국이 갑국보다 작다. 따라서 을국은 Y재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 ㄷ. 을국의 경우 교역 전 X재 1단위 생산을 위해 Y재 3/2단위를 포기해야 하지만, X재와 Y재가 1:2로 교환된다면 Y재 2단위를 주고 X재 1단위를 얻을 수 있으므로 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 없다.

바로 잡기 ㄱ. 을국은 X재 생산에 절대 우위를 가진다.

ㄷ. 갑국의 경우 교역 전 Y재 1단위 생산을 위해 X재 5/2단위를 포기해야 하지만, X재와 Y재가 1:1로 교환된다면, X재 1단위를 주고 Y재 1단위를 얻을 수 있으므로 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3	채점 기준	배점
	긍정적 외부 효과임을 쓰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구체적 예시를 포함하여 긍정적 유인을 제공해야 함을 서술한 경우	상
	구체적인 예시 없이 긍정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만 서술한 경우	중
	긍정적 외부 효과만 쓴 경우	하

14	채점 기준	배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을 고려하여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의 역할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고만 서술한 경우	하

15	채점 기준	배점
	금리 인상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예금과 주식의 수익성 변화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상
	금리 인상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으나, 그 근거를 <조건>에 맞추어 타당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중
	금리 인상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만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하

16	채점 기준	배점
	공정 무역임을 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두 가지 서술한 경우	상
	공정 무역임을 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중
	공정 무역만 쓴 경우	하

IV 세계화와 평화

주제별 형성평가

1 세계화의 다양한 양상

109~110쪽

- | | | | | |
|------|------|------|------|------|
| 01 ① | 02 ① | 03 ③ | 04 ⑤ | 05 ② |
| 06 ④ | 07 ② | 08 ② | | |

- 01** 국경을 넘어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인 세계화의 영향으로 다양한 나라의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개방화의 흐름에 따라 국경의 의미가 약해지고 국가 간·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졌으며, 국제 교역량이 증가하고 국제 사회의 상호 의존성이 커지면서 세계화가 나타났다.

바로 잡기 ① 세계화로 국경의 의미가 약화되었다.

- 02** (가)는 세계화, (나)는 지역화에 관한 설명이다.

바로 잡기 현지화는 기업이 목표 시장으로 하는 지역의 문화, 언어, 관습,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 03** 일본 홋카이도의 삿포로에서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 특색을 살린 눈 축제가 열린다.

바로 잡기 ① 타이 방콕에서는 송끄란 축제가 열린다.

② 에스파냐 부놀에서는 토마토 축제가 열린다.

④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카니발 축제가 열린다.

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백야 축제가 열린다.

- 04** 세계 도시는 정치적으로 국제기구의 본부가 위치하거나 다양한 국제회의와 행사가 개최된다. 경제적으로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국제 금융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대형 금융 기관 등이 밀집하며, 회계·법률·광고 등 전 문화된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하여 전 세계의 자본과 정보가 집중한다. 문화적으로는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여 문화 활동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 뉴욕은 세계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세계 도시이다.

바로 잡기 A는 런던, B는 싱가포르, C는 도쿄, D는 멜버른이다.

- 05** 세계 도시는 국경을 넘어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대도시를 말한다. 세계 도시에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본사나 국제 금융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대형 금융 기관 등이 밀집한다.

바로 잡기 ㄴ, ㄷ. 세계 도시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전

문화된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하여 전 세계의 자본과 정보가 집중한다.

- 06** 다국적 기업은 국경을 넘어 세계적으로 생산·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간적 분업을 하고 있다. 경영 기획·관리를 담당하는 본사는 본국의 대도시와 있고,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소는 기술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공장은 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임금 수준이 낮은 개발 도상국에 설립하여 고용 창출에 기여하기도 한다.

바로 잡기 ㄱ. 자유 무역이 확대되면서 다국적 기업이 성장하였다.

ㄷ.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 기능을 임금 수준이 낮은 개발 도상국에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 07** 다국적 기업은 국경을 넘어 세계적으로 생산 및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다국적 기업으로 세계 각지에 연구소와 공장을 두고 있다. 미국, 인도에는 연구소와 공장이 모두 입지하고, 연구소는 아시아에 많이 분포한다.

바로 잡기 ② 생산 공장은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 도상국에 주로 입지하지만, 무역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에도 분포한다.

- 08** 세계화로 특정 지역의 문화 및 자유·평등·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경제활동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다국적 기업이 성장하였고, 국제 교역량이 증가하여 세계 자본 시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

바로 잡기 ② ㉠ 세계 무역 기구(WTO)의 출범 이후 무역 장벽이 낮아졌다.

2 세계화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114~115쪽

- | | | | | |
|------|------|------|------|------|
| 01 ② | 02 ③ | 03 ⑤ | 04 ③ | 05 ① |
| 06 ③ | 07 ② | 08 ④ | | |

- 01** 제시문의 A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던 똑같은 음식을 팔고 있으며, 모든 것이 비슷해져 버렸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세계화의 문제점은 세계 문화가 선진국 문화를 중심으로 비슷해지고, 소수 민족 등의 고유한 문화가 점차 사라질 위험에 처하는 ‘문화의 획일화 및 소멸 문제’이다.

- 02 ㉠은 빈부 격차의 심화이다. 세계화에 따라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간 빈부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높은 기술력과 막대한 자본을 가진 선진국은 부가 가치가 높은 금융 서비스업이나 첨단 기술 산업 등에 집중하여 소득 수준이 높다. 반면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개발 도상국 등은 부가 가치가 낮은 제조업이나 농업 등에 집중하여 소득 수준이 낮다.

바로 보기 **㉡**. 제조업이나 농업은 부가 가치가 낮기 때문에 개발 도상국이 이들 산업에 집중 투자해도 빈부 격차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 03 교사는 이슬람 관습법이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와 충돌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보편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는 보편 윤리의 입장과 특정한 집단 내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강조하는 특수 윤리의 입장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답변으로 옳은 것은 ‘보편 윤리와 특수 윤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이다.

- 04 제시문은 세계화에 따라 세계가 지구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너무나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피해가 커졌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가)에는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매우 높아’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바로 보기 ①, ②, ④ 제시문과 관련이 없는 진술이다.

⑤ 세계화는 특정 지역의 사회적 특성이 독립적 가치를 지니는 현상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 등이 공유되면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세계화로 인한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해 설명하는 제시문과 관련 없는 진술이다.

- 05 ㉠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문화 다양성’이다.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은 인류의 공동 유산인 문화 다양성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구성원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상호 작용하기 위해 필요함을 제시한 선언이다. 이 선언은 강대국 이든 약소국이든 자국의 문화를 유지하고 종의 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06 빈부 격차의 심화라는 세계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공정한 무역 구조를 개선하여 세계화의 성과가 일부 선진국이나 기업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정 무역이나 공정 여행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다.

바로 보기 **㉢**. 국제적 차원의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발 도상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ODA)를 확대해야 한다.

- 07 싱어는 공리주의와 세계시민주의적 입장에서 원조를 통해 인류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롤스는 원조를 통해 불합리한 사회 구조나 제도로 고통받는 사회에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보기 **㉠**. 싱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원조를 통해 인류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 롤스는 빈곤의 문제가 물질적 자원의 부족이 아닌 정치·사회 제도의 결함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 08 (가)에 소개된 기업은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분쟁 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폰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안전한 노동 환경과 공정한 임금을 제공하고 있다. (나)는 유럽 연합(EU)에서 분쟁 광물에 대한 무역 규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3 평화 실현을 위한 국제 사회 행위 주체의 역할 119~120쪽

01 ①	02 ②	03 ⑤	04 ④	05 ④
06 ③	07 ②	08 ⑤		

- 01 ㉠에 들어갈 말은 ‘소극적 평화’이고, ㉡에 들어갈 말은 ‘적극적 평화’이다. 적극적 평화는 직접적·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빈곤, 기아, 각종 억압과 차별 및 불평등 등과 같이 한 사회의 구조나 문화에 의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폭력까지 모두 제거된 상태를 의미한다.

- 02 ㉠ 직접적·물리적 폭력에는 전쟁, 테러, 범죄 등이 포함되며, ㉡ 간접적 폭력에는 부정의한 사회 제도나 구조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적 폭력이 포함된다.

바로 보기 **㉢**. 문화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폭력인 문화적 폭력은 간접적 폭력에 포함된다.

㉣. 간접적 폭력은 직접적·물리적 폭력과 달리 행위자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03 제시문은 분쟁 등으로 평화가 실현되지 못하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의 기회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평화가 실현되면 인류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할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의 기반을 마련하여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 04** 제시문의 사상가는 갈통이다. 갈통은 전쟁·분쟁 등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규정한 기존의 평화론을 비판하고, 착취·차별 등의 간접적인 폭력까지 사라진 상태를 진정한 평화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갈통은 평화의 개념을 인간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는 상태인 적극적 평화로 확장하였다.

바로 잡기 ④ 갈통은 평화적 수단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05** 제시문의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영원한 평화가 달성하기 어려운 이상이지만 실행 가능한 도덕적 명령이라고 주장하였다.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위해 국가 간에 도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잡기 두 번째 입장.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실현하려면 모든 국가의 정치 체제는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화정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06** 밑줄 친 ㉠은 국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인 국가이다. 국가는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 보호를 위한 외교 활동을 최우선으로 한다. 또한 여러 국제기구에 참여하여 공식적인 활동을 하며, 양보와 타협을 통한 외교적 협상을 하는 등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바로 잡기 ③ 국가는 국민의 수나 영토의 크기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주권을 행사한다.

- 07** 국제 비정부 기구(NGO)는 국제적인 연대 활동을 통해 지구촌 공통의 문제를 제기하고 공동의 노력을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전쟁이나 테러에 따른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에 힘쓰고 있다.

바로 잡기 나, 르. 국제 비정부 기구는 민간단체와 개인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린피스뿐만 아니라 국제 사면 위원회도 국제 비정부 기구이다.

- 08** 제시문은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시민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국제 비정부 기구와 개인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들은 인권, 박해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로 잡기 ① 유명 운동선수 등과 같은 영향력 있는 개인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④ 제시문을 통해서도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이다.

③ 자연재해를 통해 발생한 대규모의 피해는 개별 국가만의 노력으로 복구하기 어렵다.

4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

124~125쪽

01 ③	02 ④	03 ④	04 ①	05 ③
06 ③	07 ③	08 ②		

- 01** 우리 민족은 1945년 8월15일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였으나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남북 분단의 과정은 (나) 지역적 분단 - (가) 체제상의 분단 - (다) 정부상의 분단 순으로 진행되었다.

- 02** 남북 분단의 국제적 배경으로는 미소 간의 냉전 대결 심화를 들 수 있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인 우리나라는 이러한 영향으로 광복과 동시에 남쪽은 미국, 북쪽은 구소련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다. 국내적 배경으로는 이념 갈등으로 인한 민족 내부의 응집력 부족을 들 수 있다.

바로 잡기 르. 광복 후 신탁 통치에 관한 찬반 논쟁으로 민족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는 남북 분단의 원인이 되었다.

- 03** ㉠은 동북공정이다. 동북공정은 동북 3성의 역사·지리·민족에 관한 문제를 2002년 2월부터 5년간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업이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인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의 역사가 고대 중국의 지방사(史)라고 주장하면서 역사를 왜곡하였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한 까닭은 현재 중국 영토 내에 있는 소수 민족을 통합하여 이들의 분리 독립을 막고 국경 지역을 안정화하기 위해서이다.

바로 잡기 ④ 동북공정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여기에 나타난 중국의 역사 인식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 04** ㉠에 들어갈 말은 '문화 원조'이다. 대표적으로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회식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조선족 대표로 출연한 것에 대해 논란이 벌어졌다. 이는 한국 문화의 원류가 중국이라는 문화 제국주의적 태도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 05 일본의 역사 왜곡 사례로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왜곡된 주장을 한 것과 1982년에 발행한 역사 교과서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을 ‘치안 유지 도모’로 표현한 것을 들 수 있다.

바로 잡기 ㄴ. 일본 정부는 1945년 이전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온 조선인 중에는 자신의 의지로 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중군 위안부’나 ‘강제 연행’과 같은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 06 교사는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 문화 유산 등재가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보여 주는 사례임을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 왜곡 사례를 묻는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 발행 문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의 정당화 문제, 침략 전쟁을 수행한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바로 잡기 ③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자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 07 서독은 독일의 통일을 위해 동독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을 분할 점령하였던 강대국들을 설득하여 이들의 독일 통일에 관한 동의를 이끌어 냈다. 독일처럼 남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남북한 간의 평화적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바로 잡기 ㄷ. 제시문에 따르면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주도적인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 08 (가)는 동아시아 역사 갈등 해결을 위한 ‘인적 교류의 확대’에 관한 내용이고, (나)는 ‘우리 역사 연구 성과 알리기’에 관한 내용이다. 그 외에도 동아시아 역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국가 간의 공동 역사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대단원 총괄 평가

130~133 쪽

- | | | | | |
|------|------|------|------|------|
| 01 ⑤ | 02 ③ | 03 ⑤ | 04 ① | 05 ③ |
| 06 ② | 07 ② | 08 ① | 09 ⑤ | 10 ③ |
| 11 ② | 12 ⑤ | | | |

- 13 (1) 지리적 표시제 (2) **예시 답안** 노르망디 카망베르 치즈, 콜롬비아 커피, 보성 녹차 등이 있다.

- 14 (1) 칸트 (2) **예시 답안** (가): 공화정 체제를 확립해야 하고 (나): 평화적 방문권을 보장해야 한다

- 15 (1) 국가 (2) **예시 답안**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 보호를 위한 외교 활동을 한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양보와 타협을 통한 외교적 협상을 진행한다.

- 16 **예시 답안** 분쟁의 해결 및 대량 살상 무기와 테러 확산 방지를 위해 세계 여러 국가와 협력한다. 개발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개발 도상국을 지원한다. 빈곤, 기아, 재난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가를 지원한다.

- 01 제시문은 샷포로 눈 축제에 관한 설명이다.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세계적 차원에서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었고, 이러한 특색을 살린 지역 축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바로 잡기 ㄱ. 세계화와 지역화는 대립하는 개념으로 보이지만,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02 제시된 도시들은 대표적인 세계 도시이다. 세계 도시는 국제기구의 본부가 위치하거나 다양한 국제회의와 행사가 개최된다.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국제 금융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대형 금융 기관 등이 밀집하며, 회계·법률·광고 등 전문화된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하여 전 세계의 자본과 정보가 집중한다. 또한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여 문화 활동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

바로 잡기 ③ 세계 도시에는 철강, 자동차, 화학 등 중화학 공업 보다는 금융, 법률, 광고 등 전문화된 생산자 서비스업이 집중되어 있다.

- 03 지도는 우리나라에 본사가 있는 다국적 기업인 ○○자동차의 공간적 분업을 나타낸 것이다. A는 본사, B는 연구소, C는 공장이다. 연구소는 기술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잡기 ㄱ. 경영·기획 관리를 담당하는 본사(A)는 본국의 대도시에 있다. 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공장(C)은 무역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에 세우기도 한다.

ㄴ. 연구소(B)는 연구·개발을 담당한다.

04 (가)를 통해 세계화가 국가 간 빈부 격차의 심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에서는 소수 민족의 고유 언어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세계화가 문화의 확일화 및 소멸 문제를 발생시켰음을 알 수 있다.

05 (가) 문화의 획일화와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문화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ㄴ). (나) 국가 간 빈부 격차의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에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공정한 무역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ㄱ). (다) 보편 윤리와 특수 윤리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ㄷ).

06 갑을 롤스, 을은 싱어이다. 롤스는 원조를 통해 불합리한 사회 구조나 제도로 고통받는 사회에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확립해야 한다고 보았고,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 문화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싱어는 공리주의적 관점과 세계시민주의적 관점에서 원조를 통해 인류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보기 ① 롤스는 빈곤의 문제가 물질적 자원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원조를 통해 국가 간의 자원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③ 싱어는 고통의 감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조를 통해 인류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보았다.

④ 싱어는 세계시민주의적 관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자신과 가까운 지역의 빈민부터 항상 우선해서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⑤ 롤스와 싱어는 원조를 통해 모든 사회의 복지 수준을 같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07 ㉠은 적극적 평화이다. 적극적 평화란 직접적·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빈곤, 기아, 각종 억압과 차별 및 불평등 등과 같이 한 사회의 구조나 문화에 의해 발생하는 간접적 폭력까지 모두 제거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직접적·물리적 폭력의 제거가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보기 ② 적극적 평화의 개념은 인간다운 삶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08 제시문의 사상가는 갈통이다. 갈통은 폭력을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

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은 물론이고 간접적 폭력인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폭력의 예방 없이는 적극적 평화를 실현할 수 없으며, 직접적 폭력과 같은 의도적인 폭력을 제거해도 구조적 폭력이나 문화적 폭력과 같은 비의도적인 폭력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보기 두 번째 입장. 갈통에 의하면 구조적 폭력이 제거되어야 물리적 폭력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네 번째 입장. 갈통은 평화의 개념을 국가 안보 개념에서 인간 안보 개념으로 확장하였다.

09 ㉠은 국제 사회 행위 주체 중 정부 간 국제기구이고, ㉡은 국제 비정부 기구이다. 국제 비정부 기구는 국제적인 연대 활동을 통해 지구촌 공통의 문제를 제기하고 공동의 노력을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국제 비정부 기구는 정부 간 국제기구와 달리 민간단체를 가입 주체로 한다. 한편 정부 간 국제기구와 국제 비정부 기구는 모두 인권, 박애와 같은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바로 보기 ㄱ. 정부 간 국제기구는 평화 실현을 위해 힘의 논리를 앞세우기보다는 분쟁 당사국 간에 원만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10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발해를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고 주장하였고, 고구려 산성을 만리장성의 일부라고 주장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바로 보기 ③ 중국은 중화 문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여러 분야에서 중국적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근 국가와 문화 원조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11 (가) 이산가족 상봉과 (나) 스포츠 남북 단일팀 구성은 남북한 간에 이루어진 교류 및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평화적 교류와 협력은 서로 간의 이해를 높여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바로 보기 ②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남북한 간에 체제 경쟁이 심화되기보다 평화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12 (가)는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는 남북통일은 정치적 통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치 체제의 단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통일을 위해 정치 체제의 단일화를 우선하는 정도(X)’는 높고, ‘통일을 위해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교류를 우선하는 정도(Y)’와 ‘통일 이전에 문화의 이질성을 제거해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Z)’는 낮다. 따라서 정답은 ㉔이다.

13	(2) 채점 기준	배점
	지역화 전략의 사례를 두 가지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지역화 전략의 사례를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14	(2) 채점 기준	배점
	(가) 공화정 체제의 확립, (나) 평화적 방문권 보장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가) 공화정 체제의 확립, (나) 평화적 방문권 보장 중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15	(2) 채점 기준	배점
	국제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 두 가지를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국제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 중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16	채점 기준	배점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 세 가지를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 중 두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 중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V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주제별 형성 평가

1 세계의 인구 현황

139~140쪽

01 ⑤	02 ①	03 ①	04 ④	05 ③
06 ②	07 ②	08 ①		

01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도와 중국이 위치한 아시아에 분포한다.

바로 잡기 ① A는 몽골로, 건조 기후가 나타나 인구가 희박하다.

② B는 중국 상하이로, 산업이 발달한 도시 지역이지만 산업 혁명의 발상지는 아니다.

③ 세계 인구의 대부분은 북반구에 거주한다.

④ 내륙 지역보다는 해안 지역에 인구가 밀집한다.

02 개발 도상국인 니제르의 인구 구조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낮다. 니제르는 1차 산업 중심의 사회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피임법이 보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출생률이 높다. 상대적으로 생활 수준이 낮고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기대 수명이 짧고 중위 연령이 낮다. 선진국인 독일의 인구 구조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낮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독일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고 자녀에 관한 가치관 변화 등으로 출생률이 낮다. 생활 수준이 높고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기대 수명이 길고 중위 연령이 높다.

바로 잡기 ② 니제르는 독일보다 중위 연령이 낮다.

③ 독일은 니제르보다 기대 수명이 길다.

④ 독일은 니제르보다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⑤ 니제르는 독일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03 기후와 지형 등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과거부터 중위도의 냉·온대 기후 지역, 하천 주변의 평야 지역, 해안 지역에 인구가 밀집한다.

바로 잡기 ㄷ.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여 전쟁이나 내전이 발생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희박하다.

ㄹ.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와 고원은 인구가 희박하다.

04 합계 출산율의 감소 폭은 아시아가 5.35명에서 1.94명으로 가장 크다.

바로 잡기 ① 1971년에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대륙은 아프리카이다.

② 2021년 오세아니아는 라틴 아메리카보다 합계 출산율이 높다.

- ③ 함께 출산율 2.1명을 인구가 유지되는 대체 출산율이라 한다. 2021년에 세계 함께 출산율은 2.32명으로 세계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 ⑤ 두 시기 모두 아프리카의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05 인구 변천 모형의 1단계는 산업화 이전의 전통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며,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아 인구 증가율이 낮다.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인구 증가율이 높아졌으나, 고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4단계에 들어서면서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 인구 증가율도 낮아진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 인구의 자연 감소가 나타나기도 한다.

바로 잡기 ③ 3단계(다)에는 자녀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 등으로 출생률이 감소하지만,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아 자연적 인구 감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06 1950~1960년과 2010~2020년의 대륙별 인구 순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아프리카는 두 시기 모두 인구 순유출이 나타난다. 아시아는 1950~1960년에는 인구 순유입, 2010~2020년에는 인구 순유출이 있다. 유럽은 1950~1960년에는 인구 순유출, 2010~2020년에는 인구 순유입이 나타난다. 따라서 (가)는 아프리카, (나)는 아시아, (다)는 유럽이다.

07 수단에서의 분리 독립과 갈등, 장기간의 내전으로 난민이 발생한 곳은 남수단(B)이다.

- 바로 잡기** ① A는 우크라이나로,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단기간에 많은 난민이 발생하였다.
- ③ C는 아프가니스탄으로, 장기간의 내전으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였다.
- ④ D는 미얀마로,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을 정부가 탄압하여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였다.
- ⑤ E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로, 식량과 약품 부족, 폭력 등을 피해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였다.

08 국제 인구 이동은 경제·정치·환경·종교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경제적 요인이나 정치적 요인에 따른 인구 이동이 활발하다.

- 바로 잡기** ② 을: 인구가 유출된 지역은 해외 이주 노동자의 송금으로 외화가 유입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
- ③ 병: 2020년 국제 연합(UN)은 해수면 상승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남태평양의 키리바시 국민을 기후 난민으로 공식 인정하였다.

- ④ 정: 인구가 유입된 지역은 이주민과 기존 주민 간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 ⑤ 무: 경제적 이동은 주로 개발 도상국에서 임금 수준이 높고 고용 기회가 많은 선진국으로의 이동이 대표적이다.

2 인구 문제와 해결 방안

144~145쪽

01 ③	02 ①	03 ②	04 ③	05 ①
06 ④	07 ④	08 ③	09 ③	

01 1950~1990년에 세계 전체 인구는 두 배 가량 증가하였고, 2000년 이후 개발 도상국의 인구는 선진국의 다섯 배를 넘었다. 선진국이 많은 유럽과 북아메리카는 현재 인구 증가율이 정체 혹은 감소 상태이다. 개발 도상국이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산업화가 확산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바로 잡기** ① 세계의 인구는 산업 혁명 이후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사망률이 낮아져 급속히 증가하였다.
- ② 대륙별 인구 비중은 오세아니아가 가장 낮다.
- ④ 세계 인구는 1900~1950년보다 1950~2000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 ⑤ 2060년에 아프리카의 인구는 약 28억 명으로 예상된다.

02 인구 부양력의 한계를 넘어 인구 과잉 상태가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경제 성장보다 인구 증가 속도가 빨라 인구 과잉 상태인 개발 도상국에서는 식량과 자원 부족에 따른 기아와 빈곤, 일자리 부족에 따른 실업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촌락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가 과밀화되어 주택과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는 도시 문제도 발생한다.

바로 잡기 ① ① 인구 증가는 일반적으로 국내 총생산 증가와 소비 시장 확대 등 경제 규모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03 자료는 개발 도상국인 니제르의 인구 피라미드이다. 인구 부양력을 초과하는 인구 증가로 인구 과잉 상태인 개발 도상국에서는 식량과 자원 부족에 따른 기아와 빈곤, 일자리 부족에 따른 실업, 지나친 도시 인구 집중으로 인한 도시 과밀화 문제 등이 발생한다.

바로 잡기 ㄴ, ㄹ.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문제이다.

04 인구 과잉 상태인 개발 도상국에서는 식량과 자원 부족에

다른 기아와 빈곤, 일자리 부족에 따른 실업, 촌락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가 과밀화되어 주택과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는 도시 문제 등이 발생한다. 인구 과잉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과 식량 증산으로 인구 부양력을 높이고 빈곤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구의 빠른 증가 추세를 둔화하기 위한 출산 억제 정책도 시행해야 한다.

바로 보기 ③ 병: 인구 과잉으로 인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 도시 육성과 촌락의 생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 05** 제시문은 고령화에 관한 내용이다.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연금 기금 확대, 사회 보장 제도 강화, 노인 일자리 확대와 정년 연장, 노인 복지 시설 확충 등이 있다.

바로 보기 ② 중소 도시 육성, ③ 촌락 생활 환경 개선은 인구 과잉으로 인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고, ④ 돌봄 및 보육 시설 확충, ⑤ 유급 출산 휴가 기간 연장은 저출생 해결을 위한 방안에 해당한다.

- 06** 독일은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지속되어 총 부양비에서 노년 부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니제르는 출생률이 높아 총 부양비에서 유소년 부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2020년 기준 독일(나)은 니제르(가)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낮으며, 노년 부양비는 높고 총인구가 많다. 따라서 D가 답이다.

- 07**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인구 정책 표어로는 ‘가갸호호 아이 둘셋 하하호호 희망 한국’이 적절하다.

바로 보기 ① 1960년대, ② 1980년대, ③ 1970년대 출산 억제 정책을 하기 위한 표어이다.
⑤ 1990년대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표어이다.

- 08** 저출생 문제의 요인으로는 높은 집값과 교육 비용, 초혼 연령 상승, 자녀 양육 부담 증가, 결혼 및 가족에 관한 가치관 변화 등이 있다.

바로 보기 ③ 저출생이 지속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력이 부족해지므로, 이는 저출생에 따른 문제에 해당한다.

- 09**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고령 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 고령 친화 기술과 연계한 사회 서비스 혁신, 의료·돌봄 연계

서비스, 복지 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등은 우리나라 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이다.

바로 보기 ③ 신혼부부 주택 공급 및 자금 지원 확대, 촌충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양육 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행복한 부모 등은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 핵심 분야 및 주요 과제에 해당한다.

3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

150~151쪽

01 ④	02 ⑤	03 ④	04 ②	05 ③
06 ⑤	07 ②	08 ④	09 ⑤	

- 01** 자연물 중 현재의 기술로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라 하고, 그중 경제성이 있어 상업적으로 널리 이용하는 자원을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라 한다.

바로 보기 좁은 의미의 자원은 석유·석탄·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 철광석·구리 등의 광물 자원, 곡식·육류 등의 식량 자원 등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순수한 천연자원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자원은 노동력·창의력·기술 등의 인적 자원과 사회 제도·조직·전통 등의 문화 자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02** 자원은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분포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자원의 편재성(㉠)이라고 한다. 자원은 기술적 수준·경제적 조건·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자원의 가변성(㉡)이라고 한다.

바로 보기 자원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일정한 시점에는 고갈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자원의 유한성이라고 한다.

- 03** 석유 매장량의 48.3%, 천연가스 매장량의 40.5%를 차지하고 있는 (가)는 서남아시아이다. 서남아시아의 페르시아만 연안에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절반 정도가 분포한다.

- 04** 2022년 기준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은 석유>석탄>천연가스 순으로 많다. 따라서 (가)는 석유, (나)는 천연가스, (다)는 석탄이다.

- 05** A는 석탄이다. 석탄은 화석 에너지 자원 중 가장 먼저 상용화되어 산업 혁명 시기에 증기 기관의 연료로 사용되면서 소비량이 증가하였다.

바로 보기 ① 천연가스는 가정용·상업용 이용 비중이 높은 편이다.

- ② 석탄의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은 중국이다.
- ④ 석유는 편재성이 크고 세계적으로 사용량이 많아 국제 이동량이 많다.
- ⑤ 천연가스는 연소될 때 석탄과 석유보다 대기 오염 물질이 적게 배출된다.

06 그래프는 석유의 생산·소비·수출·수입국을 나타낸 것이다. 석유는 내연 기관의 발명으로 자동차와 비행기 등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소비가 증가하여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바로 보기 ①, ②, ③은 석탄에 관한 설명이다. 석탄은 고기 조산대 주변에 주로 매장되어 있으며, 비교적 세계 곳곳에 고르게 매장되어 석유와 천연가스보다 국제 이동량이 적다. 석탄은 화석 에너지 중 가장 먼저 상용화되어 산업 혁명 시기에 증기 기관의 연료로 사용되면서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지만, 화력 발전과 제철 공업 등에 많이 이용된다.

④ 천연가스는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과 수송관 건설로 대량 운반이 가능해지면서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07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많은 서남아시아는 화석 에너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다.

바로 보기 ① 주로 자원 생산량이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 경제 발전 수준이 높거나 공업이 발달한 선진국으로 자원이 이동한다. ③, ⑤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개발 도상국은 화석 에너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고, 선진국은 화석 에너지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은 편이다.

④ 인구가 많고 공업이 발달한 동부 아시아가 위치한 아시아·오세아니아는 화석 에너지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다.

08 자원을 이용하면서 우리의 삶은 편리해졌지만 이에 따른 문제도 나타났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자원을 소비하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해져 일상생활과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자원 보유국이 자원 민족주의를 내세워 자원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면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에너지 소비 격차가 생기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지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바로 보기 ④ 정: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소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한다.

09 지도는 국가별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낸 것이다. 선진국이나 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는 1인당 에너지 소

비량이 많은 편이며, 중·남부 아프리카와 남부 아시아 국가는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편이다.

4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155~156쪽

01 ⑤	02 ③	03 ①	04 ①	05 ③
06 ③	07 ④	08 ⑤	09 ②	

01 기후변화는 지표 온도가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와 이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를 포함한다. 산업화 이전에는 태양과 지구의 위치 변화, 화산 활동 등 자연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산업 혁명 이후에는 인위적 요인의 영향력이 커졌다. 인간의 활동으로 이산화 탄소와 메테인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바로 보기 ㄱ. ①은 기후변화이다.

02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다양한 영향을 끼친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 면적의 축소와 해수면 상승으로 일부 해안 저지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급격한 생태계 변화로 많은 동식물이 위기를 겪고 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는 기상 이변으로 이상 고온과 폭염, 폭설과 한파, 극심한 가뭄과 홍수 등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바로 보기 ③ ㉔ 빙하의 면적이 축소되고 있다.

0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로 피해를 겪는 국가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바로 보기 ㄷ. 환경 보호를 위해 탄소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ㄹ.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낭비하거나 그 제반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04 파리 협정은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는 기후변화 협약이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더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장기 목표를 설정하였다.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195개 당사국 모두에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응에 동참하도록 규정하였다.

바로 보기 ②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6대 온실가스를 정의하였으며, 선진국 38개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였다.

③ 오존층을 보호함으로써 지구 생태계 및 동식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염화 플루오린화 탄소(CFCs)와 같은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및 사용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였다.

④ 1992년 리우 유엔 환경 개발 회의에서는 지구상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 생물 다양성 협약을 체결하였다.

⑤ 국제적 노력을 통해 사막화를 방지하고, 사막화를 겪고 있는 개발 도상국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05**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속가능한 천연자원의 이용과 관리, 자원의 재할용 독려 등 생산과 소비를 위한 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 확대, 재난·안전 지원 시스템 강화, 국제적 연대와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로 보기 ③ 재생 에너지의 소비 비중을 확대하여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06**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인 모두가 환경과 사회 구성원을 고려하는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을 실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로컬푸드 구매와 공정 무역 제품 이용 등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고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자원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사회적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취약 계층이나 빈곤국 주민 후원하기, 재능 기부 봉사 활동 참여하기 등을 실천할 수도 있다.

바로 보기 갑, 정은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에 해당한다.

- 07** 신 에너지에는 연료 전지, 수소 에너지, 석탄 액화·가스화 등이 있고, 재생 에너지에는 수력, 풍력, 태양광(열), 지열 등이 있다.

- 08** (가)는 수력, (나)는 지열 발전이다. 수력 발전은 빙하 지형과 산지가 발달한 지역, 유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지열 발전은 판의 경계에 위치하여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 09** 그래프는 풍력의 국가별 발전량이다. 풍력 발전은 바람이 강한 해안이나 섬 또는 고원 지대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바로 보기 ①, ③ 수력 발전은 빙하 지형이나 산지가 발달하여 큰

낙차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 유량이 풍부한 지역 등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④ 태양광(열) 발전은 비가 적게 내리고 일사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⑤ 지열 발전은 판의 경계에 위치하여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5 미래 사회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삶의 방향

159쪽

01 ⑤ 02 ② 03 ⑤ 04 ⑤

- 01**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고 미래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래학자나 각 분야 전문가는 전문가 합의법이나 시나리오 기법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미래를 예측한다. 예측한 미래 모습을 살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바로 보기 ⑤ ㉠ 미래 예측은 낙관적 견해와 비관적 견해가 공존한다.

- 02** 제시문은 미래에는 국제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는 내용이다. 글에 부합하는 사례로는 타국에서 발생한 난민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거나, 영국의 유럽 연합(EU) 탈퇴가 적절하다.

바로 보기 ㄴ.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금 출연, ㄹ.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 체결은 국가 간 협력 사례이다.

- 03**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로봇과 인공지능 등이 인간의 일 자리를 대체하고 여러 직업이 사라지면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생활 침해와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또한 인류 통제를 벗어나는 인공지능의 등장과 유전 공학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바로 보기 ⑤ 무: 새로운 교통수단이 일상화되면 미래에는 공간적 제약을 극복해 나가면서 인류의 활동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이다.

- 04**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 대부분 지역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생태환경이 악화된다. 농업 생산성의 하락, 생물종 다양성 감소, 사막화로 인한 토지 황폐화, 고산 식물의 분포 지역 축소 등 부정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바로 보기 ⑤ 기후가 한랭하여 경작이 어려웠던 일부 지역에서 농경이 가능해지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 사례이다.

01 ③	02 ①	03 ③	04 ④	05 ③
06 ③	07 ⑤	08 ③	09 ④	10 ③
11 ④	12 ⑤			

13 **예시 답안** (1) (가) 니제르와 같은 개발 도상국은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낮다. (나) 독일과 같은 선진국은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낮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2) (가)는 높은 인구 증가율에 따른 인구 과잉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나)는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4 (1) 석유 (2) **예시 답안** 편재성이 크고 세계적으로 사용량이 많아 국제 이동량이 많다.

15 (1) 지속가능발전 (2) **예시 답안** • 제도적 방안: 기후변화 교육 강화, 방재 시설 구축, 기후변화 예측 모델 고도화, 고온 및 병충해에 강한 작물 개발,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등이 있다. • 개인적 노력: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채식 위주의 식습관 등이 있다.

16 **예시 답안** ㉠ 국가 간 이해관계의 대립, 문화적 차이 등 ㉡ 무역 갈등 발생,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 경제적 격차 확대 등과 같은 갈등이 커질 수 있다.

01 동부·동남·남부 아시아 지역은 계절풍의 영향으로 인구 부양력이 높은 벼를 재배하여 인구 밀도가 높다.

바로 보기 ① 서부 유럽(A)은 산업 혁명 이후 공업이 발달하여 인구 밀도가 높다.

② 건조 기후가 나타나는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일대(B)는 인구 밀도가 낮다.

④ 미국 북동부 지역(D)은 도시가 집중하고 공업이 발달하여 인구 밀도가 높다.

⑤ 아마존 분지 일대(E)는 덥고 습한 기후가 나타나고 열대 우림이 분포하여 인구 밀도가 낮다.

02 인구 대국인 인도와 중국이 위치한 아시아에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해 있으며 아프리카, 유럽 순으로 인구가 많다.

03 합계 출산율은 선진국이 낮고 개발 도상국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두 시기 모두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가)는 아프리카, 1971년에는 세계 평균보다 높았으나, 2021년에 큰 폭으로 하락하여 세계 평균보다 낮은 (나)는 아시아, 1971년에 가장 낮았으며 2021년에는 두 번째로 낮은 (다)는 앵글로아메리카이다.

바로 보기 ③ 1971년 합계 출산율은 아프리카 > 아시아 > 앵글로아메리카 순으로 많다.

04 1950~1960년에 인구 순유출 지역은 아프리카, 유럽, 라틴 아메리카의 세 지역이며, 인구 순유입 지역은 아시아, 앵글로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의 세 지역이다. 2010~2020년에 인구 순유출 지역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세 지역이며, 인구 순유입 지역은 유럽, 앵글로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의 세 지역이다. 따라서 두 시기 모두 인구 순유출 지역과 인구 순유입 지역의 숫자는 같다.

바로 보기 ㄴ. 아시아는 2010~2020년에는 인구 순유출, 1950~1960년에는 인구 순유입이 있으나, 이를 통해 1950~1960년의 총인구가 2010~2020년보다 많다고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총 인구는 2010~2020년에 더 많다.

05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 도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노동력 확보로 경제가 활성화되며,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된다. 반면, 이주민과 기존 주민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바로 보기 ㄱ.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고용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다.

ㄷ. 해외 이주 노동자의 송금으로 외화가 유입되는 것은 인구 유출 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06 인구 과잉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과 식량 증산으로 인구 부양력을 높이고 빈곤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구의 빠른 증가 추세를 둔화하기 위한 출산 억제 정책도 시행해야 한다. 더불어 대도시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 도시 육성과 촌락의 생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바로 보기 ③ 출산 장려금 지원은 저출생 문제의 해결 방안이다.

07 ㉠은 독일로, 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노년층 인구 비율이 증가하여 의료비, 연금 등 노년층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노인 관련 연금 제도를 비롯한 사회 보장 제도 강화, 노인 일자리 확대와 정년 연장, 노인 복지 시설 확충 등이 있다.

바로 보기 ㄱ, ㄴ은 인구 과잉에 따른 문제이다. 인구 성장이 인구 부양력의 한계를 넘어 인구 과잉 상태가 되면 식량과 자원 부족에 따른 기아와 빈곤, 일자리 부족에 따른 실업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08 (가)는 석유, (나)는 천연가스, (다)는 석탄이다. 석유는 편재성이 커서 국제 이동량이 많다. 수송용 연료 이외에 화학 공업 및 생활용품의 원료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천연

가스는 가정용·상업용 이용 비중이 높은 편이며, 연소될 때 석탄과 석유보다 대기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한다. 석탄은 화석 에너지 중 가장 먼저 상용화되어 산업 혁명 시기에 증기 기관의 연료로 사용되면서 소비가 증가하였다.

바로 잡기 ③은 원자력에 관한 설명이다. 원자력 발전은 화력 발전보다 대기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지만, 방사능 누출의 위험성이 있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가 어렵다.

- 09** 제시된 그래프는 천연가스에 관한 것이다. 천연가스는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과 수송선 개발 등으로 운반과 사용이 편리해지면서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바로 잡기 ① 석탄은 주로 화력 발전과 제철 공업의 원료로 주로 사용된다.

②, ③ 석유는 주로 석유 화학 제품의 원료나 수송용 연료로 이용되며,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⑤ 원자력 에너지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핵분열 혹은 핵융합 시 발생하는 에너지로, 적은 양의 원료로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 10** (가)는 석탄, (나)는 석유, (다)는 천연가스이다.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전 세계의 생산과 소비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바로 잡기 ① 석유(나)는 서남아시아에서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적다. 석유는 경제 발전 수준이 높거나 공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많이 소비한다.

② 석탄(가)은 천연가스(다)보다 북아메리카에서 소비량이 적다.
④ 석탄(가), 석유(나), 천연가스(다)는 모두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다.

⑤ (가)는 석탄, (나)는 석유, (다)는 천연가스이다.

- 11** ㉠에 들어갈 개념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은 국제적·국가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 국제 연합(UN)은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규명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조직·운영하고,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는 개발 도상국의 빈곤 해결, 경제·사회 발전,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공적 개발 원조(ODA)를 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재난·안전 지원 시스템 강화,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 확대 등이 있다.

바로 잡기 ④ 사회적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취약 계층이나 빈곤국

주민 후원하기, 재능 기부 봉사 활동 참여하기 등을 실천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노력에 해당한다.

- 12** 미래 사회는 우리 선택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과학기술의 활용, 생태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인류 통제를 벗어나는 인공지능의 등장과 유전 공학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바로 잡기 ㄱ. (가)는 과학기술을 이용한 미래 사회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ㄴ. (나)는 과학기술을 악용한 미래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1) 채점 기준	배점
(가), (나) 지역의 연령별 인구 구조 특징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가), (나) 지역의 연령별 인구 구조 특징을 하나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2) 채점 기준	배점
(가), (나)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구 문제를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가), (나) 지역 중 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구 문제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2) 채점 기준	배점
석유의 국제 이동 특징을 편재성 및 소비 지역과 관련하여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석유의 국제 이동 특징을 편재성이나 소비 지역과 관련하여 하나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2) 채점 기준	배점
‘13 기후변화와 대응’을 위한 국제적·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방안과 개인적 차원의 노력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13 기후변화와 대응’을 위한 국제적·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방안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13 기후변화와 대응’을 위한 개인적 차원의 노력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채점 기준	배점
정치적·경제적 갈등 상황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정치적·경제적 갈등 상황 중 하나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

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통신·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저작자·발명가·과학 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부담권을 가진다.

-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 음식물 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⑤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② 군인·군무원·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 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③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 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

-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 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 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 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 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50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 ② 정부는 회계 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새로운 회계 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제55조** ① 한 회계 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② 국회는 선전 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62조** ① 국무총리·국무 위원 또는 정부 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 위원 또는 정부 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 위원 또는 정부 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해임 건의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64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 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 ④ 탄핵 결정은 공식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 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 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기본 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 정책

3. 헌법 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 처분의 기본 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5. 대통령의 긴급 명령·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 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 각부 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 계획
12. 국정 처리 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 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 총장·합동 참모 의장·각 군 참모 총장·국립 대학교 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 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 원로로 구성되는 국가 원로 자문 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가 원로 자문 회의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 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 국가 원로 자문 회의의 조직·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대외 정책·군사 정책과 국내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 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 보장 회의를 둔다.

② 국가 안전 보장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 안전 보장 회의의 조직·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 평화 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의 조직·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 경제 자문 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 경제 자문 회의의 조직·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 각부

제94조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 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 범위·감사 위원의 자격·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③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 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 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① 군사 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 법원으로서 군사 법원을 둘 수 있다.

- ② 군사 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 ③ 군사 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 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 음식물 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 2. 탄핵의 심판
- 3. 정당의 해산 심판
- 4.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 5. 법률이 정하는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 관리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 관리 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 관리·국민 투표 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 관리 위원회의 조직·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 각급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 등 선거 사무와 국민 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 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① 선거 운동은 각급 선거 관리 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 자치

제117조 ① 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 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 의회의 조직·권한·의원 선거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 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 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 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 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 행위를 제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 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 표준 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 개정

제128조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이 헌법 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 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는 이 헌법 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 선거 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 이 헌법 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 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헌법 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 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